

위안부 사과·과거사 청산 진전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군 위안부 입장차 여전...조기 타결 위한 협의 속도 日, 韓 TPP 참여시 협력...경제 고위급 협의체 추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역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향후 양국 간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군 위안부 문제...협조 예상=양 정상 이날 회담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부각하기보다 해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안부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협의의 밀도와 속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한국 측의 '연내 타결' 압박을 아베 총리가 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의 없는 합의'라는 지적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본의 사죄나 책임 인정 등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진전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구체적 타결안 마련은 기존 위안부 협상 통로인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비롯한 각급 외교채널로 넘어가게 됐다.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가 가속화하면서 기

존 국장급인 협의 채널이 급을 높이는 등 협상 형태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과거사 문제는 전혀 진전없어=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차도 재확인, 미래 관계 호전에 대한 기대를 낭망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 대한 대응적이고 진심 어린 태도를 요구했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미래 관계만 얘기한 것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회담종료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 미래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8월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 아이들, 손자들,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들이 계속해서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일본 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성과는=우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또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해 고위급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한일 기업이 협력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LNG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해 판매자 위주로 경직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 위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강압적 대북 정책 성과 없어”

손학규 은퇴후 첫 현안 언급...“경제 복귀와는 무관”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 이 해의 대북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제는 퇴선 후 처음으로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손 전 고문은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키렘대학 강연에서 “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관계가 좋았고 통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런 기대는 실제 성과로 나타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화와 교류의 대가로 어떤 물질적 보상을 주지는 않는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뒤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이 북한은 물론 남한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지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권붕괴 시나리오에 기반한 강압적 전략이 아니라 관계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은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 내용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재개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손 전 고문 측은 2일 “남북관계에 대한 지론을 얘기하려면 현정부 정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경제복귀와 무관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손 전 고문 측은 강연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글을 내렸다. 애초 지난 1일 돌아올 예정이던 손 전 고문은 현지 일정이 길어져 오는 4일 오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 내 ‘손학규계’로 알려진 전현직 의원 20여명은 이낙연 전남 지사의 주도로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모임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국회의원 3석 감소 현실화”

신정훈 새정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2일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 “광주, 전남·북에서 1석씩 모두 3석 감소가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선거구당 인구를 고려하면 전남에서는 2~3석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영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감축은 사력을 다해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폐합이 유력시되는 광주 선거구는 ‘호남 정치 1번지’인 광주 동구가 유력하다.

신 의원은 “인구, 행정구역, 문화생활권 등 기준을 고수하는 규정이나 유사 사례 등에 비해 동구 선거구를 유지하지



는 요구는 관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남에서는 장흥·강진·영암군, 나주·화순, 고흥·보성, 목포, 무안·신안 등 선거구가 통폐합 또는 시·군 단위 조정 등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하위 20%’ 현역 물갈이 방침에 대해서는 “불출마하거나 현직히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을 빼면 5~10%만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크고 작은 분열을 겪었던 당이 국정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다시 통합하는 상황만큼 지도부와 의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 총선 승리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한·미 “북 미사일 대비 ‘4D 작전계획’ 수립”

안보협의회 16개 공동성명 발표...전작권 전환계획 승인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2일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도 서명했으나 민감한 분야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의제로 논의하지 않았다.

한민군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에는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앞

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4D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도 승인하고 서명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군이 완전히 이런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대(對)화력전 능력 공동 검

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의 현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한다. 한민군 장관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이 시기에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 전력인 210화력여단이 이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준비하면서 미측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 4개 핵심기술 이전문제는 미 정부의 ‘불가’ 방침이 확고한 만큼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민예산마켓’ 핵심예산 제안 16건 선정

새정치, 광주시당 2건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일반 국민으로부터 정책·예산 관련 제안을 구매하는 ‘국민예산마켓’을 통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할 ‘2016년 핵심 예산 아이디어 1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에선 설정환 정책실장과 서구갑지역위원회 장성준 부장이 제안한

‘어린이 전용 등하원 정류장’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증원예산’ 등이 각각 선정됐다. 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명절 상여금 지원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과 출산자 혜택 증진 제도 등도 포함됐다. 청년층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마일리지 카드’ 도입 예산 아이디어도 선정됐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사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